

202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기획재정부 등 소관)

2025. 11.

대한민국정부

- 목 차 -

(통계청(現 국가데이터처): 22건)

1. 물가지수 등 통계지표 체감도 제고	1
2. 지역별 GRDP 작성 시기 개선	1
3. 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	1
4.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상자산 보유현황 포함	2
5. 통계작성 변경의 사전승인 절차 준수	2
6. 농가경제조사 작성 개선	3
7. 통계 발표 시차 및 주기 단축	4
8.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통계 확충	5
9. 안전한 통계 조사 환경 조성	6
10. 조직 및 운영 개선	7
11.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 작성 필요	8
12. 타 기관 통계와의 정합성 필요	8
13. 출산율 추계의 정확성 개선 필요	9
14. 60~64세를 포함하여 연금통계 작성 필요	9
15. 사회적 고립도 조사 실시 필요	10
16. 가계부채 관련 통계 개선 필요	10
17. 국민의 행복을 반영하는 지수 개발 필요	10
18. 자산불평등에 대한 통계 개발 및 기후위기에 대한 분석 필요	11
19. 통계조사원 처우 개선 필요	12
20. 가계동향조사의 불응률 개선 노력 필요	12
21. 외국인 사망자 관련 통계 생산 필요	13
22. IMD 국가경쟁력지수 관련 검토 필요	14

통계청

[現 국가데이터처]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물가지수 등 통계지표 체감도 제고 · 자가주거비, 신규 상품·서비스 등을 물가지수 품목에 반영하는 등 통계지표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u>조치 중</u> ☐ 소비자물가지수는 최근 소비자 기호 및 구매패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대표품목, 가중치 등을 '25년 기준으로 전면 재조정하는 기준년 개편을 추진 중 * '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계획 수립('24. 5.) <향후 추진계획> ☐ 대표품목 선정 및 가중치 개편, 자가주거비 포함여부 등 '25년 기준 개편결과 공표 예정('26. 12.)
2. 지역별 GRDP 작성 시기 개선 · GRDP를 예산안 및 정책에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작성 시기를 앞당길 것	<시정·처리결과> <u>조치 완료</u> ☐ 지역별 GRDP 작성 시기 개선 ○ 지역소득 통계 시의성 강화를 위해 분기 GRDP를 개발하여 실험적통계로 공표*('25. 6.) * 보도자료 및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제공 <향후 추진계획> ☐ 실험적통계인 분기 GRDP를 공식통계로 전환 예정('26. 12.)
3. 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 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 · 국가통계 품질제고를 위하여 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시정·처리결과> <u>조치 완료</u> ☐ 개선과제 이행상황 정기점검(3월, 9월), 장기간 미이행 개선과제 특별 관리* 등 점검을 체계화하고, 적극적으로 이행을 독려 * 8월 추가 점검, 통계책임관 회의 개최, 기관 방문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개선과제 이행 독려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이행 시 시정요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예정
4.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상자산 보유현황 포함 · 가상자산 보유현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적절한 조사방식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u>조치 중</u>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 자산의 포괄범위 확대를 위해 가상자산 조사를 추진 중 ○ 현재 분류기준 등 법·제도 관련 국내외 논의 진행 중 ○ 또한, 기존 조사방식 외에도 가상자산 관련 기관 및 업체 등과 협의 진행('25.11,12월) <향후 추진계획> ☐ 가상자산 항목의 공표 시기는 국제기준 마련과 시계열 안정성 등 종합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임
5. 통계작성 변경의 사전승인 절차 준수 · 각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의 변경에 대한 통계청의 사전승인 절차 준수율이 저조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시정·처리결과> <u>조치 완료</u> ☐ 승인신청 시점 합리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개정 완료(9월) ○ 비조사 통계^(보고·가공통계) 변경승인 신청시기 : (기존) 자료수집 20일 전 → (개선) 공표 20일 전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 교육·홍보를 통해 승인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리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 농가경제조사 작성 개선 · 농가경제조사 표본 교체 시 지표의 연속성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1인 농가를 포함하여 통계의 정확도를 개선할 것	<시정·처리결과> <u>조치 중</u> ☐ 1인 농가 포함 농가경제조사 결과 ○ 1인 이상 농가경제조사 결과 공표*('25. 5. 23.) * '23~'24년 농가경제조사 핵심 지표 우선적 작성·공표 <향후 추진계획> ☐ 1인 농가 포함 농가경제조사 결과 ○ 1인 포함 소득지표 단계적* 확대(~'28년) 공표 * 데이터 품질 확보를 전제로 공표 범위의 점진적 확대 필요 ☐ 표본 교체 시 지표의 연속성 단절 방지 계획 ○ 농가경제조사는 5년 주기로 농림어업총조사 모집단을 반영하여 표본을 개편함 ○ 표본개편 후 '23년 조사 결과는 신뢰성 높음에 해당하나, <(참고) 상대표준오차(RSE) 신뢰도 수준> <table><tr><td></td><td colspan="2">RSE < 30%</td><td>30% ≤ RSE < 60%</td><td>60% ≤ RSE</td></tr><tr><td></td><td>표본수(n) ≥ 10</td><td>표본수(n) < 10</td><td></td><td></td></tr><tr><td>해석</td><td>신뢰도 높음</td><td>신뢰도 다소 낮음</td><td>신뢰도 다소 낮음</td><td>신뢰도 낮음</td></tr></table> ○ 향후, 변화하는 농촌현실 반영도를 높이는 보다 세밀한 모집단 분석과 표본설계('27년)를 통해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고, 개편 1년차('28년) 조사 시 정확한 현장조사와 품질검증으로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		RSE < 30%		30% ≤ RSE < 60%	60% ≤ RSE		표본수(n) ≥ 10	표본수(n) < 10			해석	신뢰도 높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낮음
	RSE < 30%		30% ≤ RSE < 60%	60% ≤ RSE												
	표본수(n) ≥ 10	표본수(n) < 10														
해석	신뢰도 높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낮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통계 발표 시차 및 주기 단축 통계의 효용성 제고를 위하여 포괄적 연금통계 등 발표 시차가 18개월 이상인 통계의 발표 시차와 5년 주기의 생활시간조사 및 가계생산 위성계정의 통계 작성 주기를 단축할 것	<시정·처리결과> <u>조치 완료</u> ☐ 연금통계 공표시기 단축 - 통계의 효용성 제고를 위하여 '24년도에 연금통계 공표시기를 단축*하였음('24. 8.) * 공표주기: 익익년 10월 → 익익년 8월(2개월 단축) <향후 추진계획> ☐ 연금통계 공표시기 단축 지속 노력 - 통계생산 단계별 불가피한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공표 단축의 어려운 점은 있으나, 자료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공표시기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음
	<시정·처리결과> <u>조치 중</u> ☐ 5년 주기인 생활시간조사는 그간 통계의 시의성·정확성 제고를 위해 조사주기 단축과 조사 횟수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옴 * '24년 제6회 조사에 '봄' 추가, 기존 3회→4회로 확대 향후 국민의 생활양식 변화를 적기에 포착하고, 정책활용성 높이기 위해 조사 주기 단축^(5년→3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향후 추진계획> ☐ 주기단축의 기반 마련에 필요 예산확보 및 인력증원을 위한 관련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26년)

시정 ·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시정 · 처리결과> <u>조치 중</u> ☐ 국민이전계정 공표시차 2개월 단축 ○ 국민계정(익년 6월 공표)을 활용하여 11월에 공표하던 국민이전계정을 '25년에는 9월 말에 공표 ☐ 가계생산위성계정 공표시차 2개월 단축 ○ 생활시간조사 공표 후 익년 6월에 공표하던 가계생산위성계정을 익년 4월('26.4월)에 공표 <향후 추진계획> ☐ 가계생산위성계정의 작성 주기는 기초자료인 생활시간조사의 작성 주기에 따르므로, 생활 시간조사의 작성 주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8.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통계 확충 · 통계청은 지역소멸 및 인구 감소 대응 등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역통계를 확충할 것	<시정 · 처리결과> <u>조치 완료</u> ☐ 인구감소지역(89개)*의 생활인구 작성 및 제공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89개 자치 시군구 ○ 인구감소지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함 ☐ 지역인구 주요 지표 7종*에 대한 국가통계 포털(KOSIS) 서비스 제공 중 * 인구수,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인구비율, 청년인구비율, 청년순이동률, 추계인구, 생활인구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지자체가 생산하는 지역특화 통계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 작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u>조치 완료</u> ☐ 지방청(지청)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통계 컨설팅, 생산대행, 기술지원 등을 통한 지역특화통계 생산지원 추진 ○ 매년 지자체 대상 지역통계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역통계 개발 및 지원 실시 * 지역통계 생산대행, 기술지원, 맞춤형 컨설팅, SDC 기반 작성지원 등 지자체가 필요한 신규통계 개발(개선)수요 파악 ☐ 지역통계 관련 기관 간 공식적인 소통·협업의 장 운영으로 지역통계 확산 및 활성화 추진 ○ 지역통계발전포럼('25. 6.), 중앙-지방지역 통계협의회('25. 12.), 열린소통회의('25. 3., '25. 9.) 개최 등
9. 안전한 통계 조사 환경 조성 · 통계조사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 및 위험 지역 조사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u>조치 완료</u> ☐ 통계조사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야간조사, 안전유의지역* 방문 시 동료(2인 1조)와 동행 출장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운영지침(훈령) 및 내부 매뉴얼에 규정 * 유흥업소 및 숙박시설 밀집지역,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철거 지역 등 ○ 동행조사 확대를 위해 '25년 상시출장여비 증액('25년 1.9억 원 증액)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 조직 및 운영 개선 · 통계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의 용역계약 비중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개정('25. 11.) ○ 기존 고시가 위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이 일괄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단독 수행 여건이 부족한 중소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개별 사무별로 수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확대하였음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 개정('25. 11.)> <개정 전> 제9조 (사업위탁 및 계약) ① <u>통계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제4조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년 이내로 위탁하되, 매년 사업개시 전에 사업범위 및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을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개정 후> 제9조 (사업위탁 및 계약) ① <u>국가데이터처장은 수탁기관에게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탁사업을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무별로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년 이내로 위탁하되, -----</u> -----. ☐ 아울러,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및 행위 제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음 ○ 국가데이터처 퇴직자가 재취업한 일부 기관 (한국통계진흥원, 한국통계정보원(기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한 행위제한(업무취급제한) 규정 준수를 위해 '22년부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취급 승인' 심사를 받고 있음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9조에 따른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퇴직공직자 취업·행위제한 준수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재취업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11.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 작성 필요 ·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통계청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할 것	<시정·처리결과> <u>조치 완료</u> ☐ 소외계층을 살펴보고자 고립·은둔, 다문화, 이주배경, 옥탑·반지하, 장애인 등 다양한 통계 개선·개발을 추진 ☐ 사회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 기존 조사 개선 ○ 사회조사에 외로움, 외출 등 신규 문항을 추가하여 고립·은둔 관련 현황 파악('25. 5.)·공표('25. 11.) ○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등록센서스) 취약계층 항목 공표 확대 * 옥탑·반지하 공표, 장애인 통계 공표범위 확대 및 장애정도별 장애인 1인 가구 등 신규 공표('25. 7.)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등 전 연령 인구를 포괄하는 등록센서스 이주배경인구통계 신규 공표('25. 12.) ○ '25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부문) 가족돌봄 청소년(영케어러) 파악, 비혼동거 항목 신규 조사('25. 11.) ※ '26년 11월 말 공표 예정
12. 타 기관 통계와의 정합성 필요 · 통계청과 타 기관 간 거시경제 지표가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 지표가 정합성을 가지도록 개선할 필요	<시정·처리결과> <u>조치 완료</u> ☐ 산업활동동향은 타 기관 통계 지표(GDP 등)와 작성 목적 및 측정 범위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자 목적에 따라 각각의 통계를 의미 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언론소통 및 홍보를 강화하였고, 한국은행과 정합성 제고 관련 업무협의를 실시함 * 기자간담회('25. 5. 14), 신입기자 교육 ('25. 9. 11), 경제통계 협력협의회('25. 5. 16.)

시정 ·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통계 이해도를 높이는 충실한 브리핑 및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13. 출산율 추계의 정확성 개선 필요 · 통계청의 출산율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추계 모델을 변경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 · 처리결과> 조치 완료 ☐ 인구추계 모형 개선방안 종합 검토 중 ○ 최근 출생 추이 반영,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추계 모형 개선 지속 검토 * 「장래인구추계 출산력 및 시도 인구추계 개선방안」 정책연구('24. 12) 수행 ○ 최근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요인도 고려하는 추계 모형에 대한 기초 연구 추진 중 <향후 추진계획> ☐ 2025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작성 시 개선 모형 적용('26. 12. 공표) ○ 모형 개선과 함께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요에 기반하여 다양한 시나리오 제공 예정									
14. 60~64세를 포함하여 연금통계 작성 필요 · 통계청의 연금통계에서 제외된 60~64세에 대한 조사를 추가 사업으로 진행할 것	<시정 · 처리결과> 조치 완료 ☐ '23년 연금통계 작성 개선계획 수립('25. 5.) ○ 60~64세 연령대를 추가한 연금통계의 포괄범위 확대* <연금통계 포괄범위 확대(안)> <table><tr><th>작성대상</th><th>기 존</th><th>개 선(확대)</th></tr><tr><td>수급자</td><td>65세 이상</td><td>60~64세(추가) + 65세 이상</td></tr><tr><td>가입자</td><td>18~59세</td><td>18~59세 + 60~64세(추가)</td></tr></table> ☐ '23년 연금통계 작성결과 공표('25. 8. 25.) 및 자료 제공('25. 9. 24.)	작성대상	기 존	개 선(확대)	수급자	65세 이상	60~64세(추가) + 65세 이상	가입자	18~59세	18~59세 + 60~64세(추가)
작성대상	기 존	개 선(확대)								
수급자	65세 이상	60~64세(추가) + 65세 이상								
가입자	18~59세	18~59세 + 60~64세(추가)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60~64세 연령대 연금통계 결과를 보도 자료 본문에 수록·공표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15. 사회적 고립도 조사 실시 필요 · 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 고립도에 대한 종합적·지속적·정례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 고립·은둔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2025년 사회조사에 외로움, 외출 등 신규문항을 추가하여 조사 실시(5월) ○ 2025년 사회조사 결과는 '25. 11. 공표 예정 <향후 추진계획> ☐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조사 실시 및 결과 제공 * 신규문항이 포함된 「사회참여」 부문은 2년마다 조사(홀수년도)
16. 가계부채 관련 통계 개선 필요 · 가구별 가계부채 DB를 조속히 구축하여 분기별 공표를 하거나 한국은행 가계부채 DB를 국가통계로 승인하는 등 가계부채 통계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 기존 가계부채 통계의 한계 극복을 위해 한국은행 가계부채통계 승인 ○ 「통화금융통계」에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분기 작성) 추가하여 변경승인('25. 9. 2.)
17. 국민의 행복을 반영하는 지수 개발 필요 · 경제지표 외에 국민행복을 반영할 수 있는 국민삶의질 지수 또는 국민행복지수 등을 개발하고, 해당 지수의 분야별 비중 결정 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	<시정·처리결과> 조치 완료 ☐ 국민 삶의 질과 행복 측정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작성하여 서비스 중임 ○ 중립성이나 가중치 부여 등을 고려하여 종합지수는 작성하지 않으며,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민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해외 통계청에서도 종합지수보다는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는 사례가 일반적임 ☐ 지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생애주기별로 세분화된 삶의 질 지표를 작성 중임 ○ 사회변화와 다양한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지표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 '25년 아동청소년 및 청년 대상 삶의 질 지표를 작성하였고, 26년 고령자 삶의 질 작성 계획임
18. 자산불평등에 대한 통계 개발 및 기후위기에 대한 분석 필요 · 자산 및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한 결혼율·출산율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를 개발하고 기후위기가 경제 및 소득불평등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등을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u>조치 완료</u> ☐ 개인의 '혼인·출산'과 '경제·사회적 특성' 및 '정책제도 효과'를 상호 연계한 인구동태패널통계 개발 추진 * 국가통계(제101094호) 작성 승인('25. 7.) ○ 거주지, 취업활동(근로소득, 종사상 지위, 기업규모), 등 경제·사회 특성별 생애사건(미혼→혼인→출산) 유지·이행 비율 분석 <향후 추진계획> ☐ 인구동태패널통계 개발 결과 제공('25. 12.) <시정·처리결과> <u>조치 중</u> ☐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한 통계개발은 다수 부처가 관련된 사안으로 범정부 협력이 필요 ○ 현재, 국내 기후 관련 통계 생산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등 여러 기관에서 담당 * 기후취약계층실태조사 '25년 시범조사, '26년 본조사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기후변화 지표 프레임워크 기반 통계 분석 보고서 작성 중 ○ 동 프레임워크는 기후변화 5대 영역*의 하나로 취약성 영역을 다룸 * 원인, 영향, 취약성, 완화, 적응 <향후 추진계획> □ '26년 초에 '기후변화 통계지표 분석보고서' 발간 예정
19. 통계조사원 처우 개선 필요 통계조사원들의 불리한 처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	<시정·처리결과> <u>조치 완료</u> □ 우수조사원 확보 및 중도 포기 방지 등을 위해 '24년부터 도급조사원 현장조사 교통비 지급 중 ○ 도급조사원 대상 업무만족도 조사와 중도 포기 사유 등을 파악·반영함으로써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20. 가계동향조사의 불응률 개선 노력 필요 가계동향조사의 불응률을 낮추기 위해 통장을 명예 통계조사원으로 위촉하는 등 방문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SI를 활용한 조사기법을 개발할 것	<시정·처리결과> <u>조치 완료</u> □ 높은 불응률에 대응하고자 예비가구를 활용한 표본가구 대체, 불응설득반 운영, 2인 1조 동행출장 및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 노력 실시 중 ○ 그 결과, 전체 조사대상 7,200가구 대비 조사 완료한 표본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 * 유효표본 비율(%) 21년 66.4→22년 68.2→23년 70.6→24년 73.1 ○ 아울러, 지방청에서는 이·통장 대상으로 통계조사 설명, 협조 요청 및 홍보 실시를 통해 응답률 제고 노력 중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응답자 편의성 증대를 통한 응답부담 완화를 위해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조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25년) * OCR자료 인공지능 통계분류시스템 개발 <향후 추진계획> ☐ AI기반 자동항목분류 기능 시스템 적용 및 광학문자인식(OCR)기능 고도화를 위한 연구 추진('26년~)
21. 외국인 사망자 관련 통계 생산 필요 · 법무부와 협의하여 외국인 사망자 관련 사망원인별, 체류자격별, 국적별 통계를 작성할 것	<시정·처리결과> <u>조치 완료</u> ☐ 작년 국감 이후 법무부가 「외국인 사망 통계」 현황들을 향후 공표하는 방향으로 협의 ○ 외국인 사망관련 자료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집·관리 중 * 외국인 사망자료 관리 현황과 외국인 사망통계 작성 및 공표여부 논의('24. 12. 17., 법무부 이민정보과,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참석) ☐ 최근 법무부는 「외국인 사망통계」 작성 및 공표에 대해 내부 검토 중으로 확인('25. 10. 17 유선확인) ○ 등록외국인 사망자 집계는 가능하나 사망 원인통계 작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에 업무협조를 검토 중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이민정보과) <향후 추진계획> ☐ 법무부에서 사망원인 등 작성기법 관련 요청 시 적극 협조하겠음

시정 ·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2. IMD 국가경쟁력지수 관련 검토 필요 · IMD 국가경쟁력지수 인용 시 왜곡 등 발생한 오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할 것	<시정 · 처리결과> <u>조치 완료</u> ☐ e-나라지표는 국정모니터링 관련 748개 지표의 데이터를 시의성 있고 정확하게 관리·제공하고 있음 ○ 다만, 국가경쟁력지수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면서 지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음 * 재정건정성 순위를 단순히 막대그래프로 시각화 ☐ 이에 e-나라지표 전체 지표를 점검하고, 지표 특성에 부합하는 그래프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24. 10.) * 순위로 표시되는 지표의 경우, 막대그래프에서 꺾은선 그래프로 변경하고, 상위 순위가 높게 표시되도록 수정 <향후 추진계획> ☐ 향후 e-나라지표가 추가·변경되는 경우, 적절한 그래프가 제공되도록 관리하겠음